"학제 개편 모든 방향 열려 있다"

교육부, 시민단체 토론회 밝혀
학부모단체 "당장 철회하라"
민주 "국민 패싱 졸속 행정"

교육부가 4일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패싱' 졸속 행정"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아·초등부분에 국가 교육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보통합이라든지 초등 전일제라든지 그 연장선상에서 초등 입학을 5세로 하향하는 것은 하나의 안건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관은 "사회적 논의로 제안을 하고 절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며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5세 유아를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책임질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어떤 형태든 파급효과가 큰 점을 알고 있다. 공감대를 전제로 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정책관은 특히 만 5세 입학안이 "2025년부터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알려진 부분은 교육부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시행 계획이 알려진 것에 대해 "저희(교육부)의 불찰"이라고도 말했다. 당초 확정된 안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된 것이 확대돼 국민에 알려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를 향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범국민연대의 임미령 사무국장은 "왜 국정과제나 공약에도 없는 엉뚱한 정책을 들고 나왔느냐"라며 "공론화한다고 세금을 쓰지 말고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 국민 패싱' 졸속 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만 야기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졸속 발표된 정책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만 5세 영유아 발달 과정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 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토론회에서 "학제 개편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권정윤 교수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만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를 조기 취학시키면 학교 부적응아들을 더 많이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지현 대표는 "입시 경쟁 구조가 공고한 상황에서 입학 연령을 낮추면 영유아들의 조기인지 교육만 더 부추긴다"며 "사교육 시장만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대표 "대통령 관저 의혹 국정조사 검토"

조속히 진상규명 착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비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동문서답 혹은 묵묵부답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 운영위 개최를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집무실 관저 공사 '사적 수주' 의혹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 전반을 바로잡는 일에 책임있게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남을 갖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은 휴가 중이라 안만난다고 했다가, 다시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다시 만남이 없다고 번복했다"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 꼴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휴가를 즐기고 있다"이라며 "집권 여당도 내부 권력다툼에 매몰돼 책무를 잊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 바이러스가 국정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일반 당원도 후보로 나선다

광주전남개혁연대, 등록 추진
국회의원 vs 당원 경선 주목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일반 당원이 후보로 나서는 등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개혁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혁을 바라는 당원과 시민의 모임이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민과 당원이 주도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후보를 내 당원들에게 시당위원장의 선출 권한을 되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 패배라는 국민의 심판으로도 부족해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에 실망한 지역 활동가들이 정치 개혁을 결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개혁연대는 오는 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기인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8~9일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공고한 뒤 11일 후보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은 통상 지역 국회의원들 간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돼왔으며, 이번에도 지역 국회의원 간 합의를 통해 단일 후보 선출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과거에 지역 국회의원 간 경선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 간 합의 추대가 많아 당원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해왔던 불만이 컸다. 이번 시당위원장에는 이병훈(광주 동남구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민주당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개혁을 바라는 당원 후보 간 경선이 치러질지 주목된다. 광주전남개혁연대 관계자는 "개혁연대에는 권리당원뿐 아니라 민주당의 개혁을 원해 입당한 분도 많다"며 "시당 위원장 후보자가 많으면 단일화 등을 거쳐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회재 "20대 이하 7만여명이 12조 증여 받아"

지난해 20대 이하 국민 7만여명이 12조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로는 2.4배 수준으로 급증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9103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7만115명이었다. 1인당 평균 1억7000만원의 자산을 받은 셈이다.

2017년 3조8233억원 수준이던 20대 이하 증여자산은 2018년 4조9245억원, 2019년 5조2087억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 4조893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020년 대비 2.4배로 급격하게 뛰어올랐다.

저금리 기조에 자산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증여에 나선 자산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 증여 받은 자산은 지난해 기준 20대가 9조14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10대 1조8344억원, 10세 미만 92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20대 5조4545억원, 10대 1조607억원, 10세 미만은 5020억원 늘어난 수치이다.

증여 받은 인원은 20대 4만6756명, 10대 1만3975명, 10세 미만 9384명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K자형 자산 양극화가 코로나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났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의 자산을 지원하는 등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검찰,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검토

"손해 알면서 부당 지시 원전 폐쇄"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4일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를 최종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기소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다.

하지만 1년여간 보강 조사를 통해 최근 백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급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